

박원순 시장 민선 7기 돌입

자영업자·돌봄·남북교류 키워드로 시민의 삶 바꾼다

서울페이 카드수수료 0% '기대'
육아방 450개·기초보장 확대도

현정사상 첫 3선 연임에 성공한 박원순 시장이 1일 민선 7기 서울시정에 돌입했다.

박 시장은 선거캠프에서부터 제시해온 공약들 중 무엇보다 자영업자 등 민생 안정과 가족돌봄 사업 등을 수차례 언급해왔다. 또한 남북 및 북미관계의 전환적인 개선 분위기 속에 도시 '서울'이 평양 등 북한의 여러 도시들과 주민들의 삶과 관계된 교류들을 추진해 나간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핵심 공약들의 이행을 위해 이달 초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각 분야별 자문회의를 거쳐 민선 7기 시정운영계획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을 약속하겠다"고 한 박 시장이 어떻게 공약을 시정에 풀어갈지 주목된다.

박 시장은 앞으로 시정으로 풀어낼 공약 가운데 제일 자신 있는 것으로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책을 꼽았다. 그는 "많은 공약들 중에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공약, 서울페이를 통해 카드수수료를 0%로 낮



박원순 시장이 1일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수해방지 상황을 보고받은 뒤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는 것에 기대가 크다"고 한 바 있다. 그는 특히 선거기간 동안 현장을 누비며 실제로 카드수수료로 많게는 몇 백만원씩 가게들이 지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며, 서울페이가 앞으로 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시장이 후보 시절 제시한 5대 공약 중에도 자영업자를 위한 공약으로 격차없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중앙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자영업자고용보험료 30%에서 서울시가 20%를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공약이 나온다. 더불어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 1인당 연 15일까지 병가를 부여하고,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의 일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가족돌봄, 민생과 관련한 공약들도 앞

으로 어떻게 실제 시정에서 펼쳐지게 될지 눈길을 모은다. 박 시장은 주민에게 돌봄 서비스 신청을 받아 72시간 내 가구를 방문해 돌봄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센터'를 설치한다고 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를 현재 30%에서 50%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서울 자치구에 육아방 450개를 만들고 보육반장도 상주시기로 했다.

더불어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7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에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빈곤가구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박 시장은 관련 공약으로 서울-평양 도시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시장 당선 이후 간이 기자간담회, 'DMZ(비무장지대) 피스 트레이너 뮤직 페스티벌' 등과 같은 행사에서도 남북 도시간 교류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해왔다. 그는 이 같은 남북관계 훈풍 분위기 이전까지 서울이 한반도 경제 긴장 속에서 늘 세계 도시경쟁력 순위에서 저평가돼 온 측면들을 전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정부 협력을 얻어 빠른 시간

안에 북한에 방문해 지금까지 배워보지 못했던 서울과 평양, 서울과 북한의 여러 도시들과의 협력을 추진해 큰 틀에서 국방이나 안보, 이런 틀에서 이뤄진 정부의 진전을 시민, 주민들의 삶과 관계된 것들로 서울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외에도 박 시장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도시재생에 방점을 둔 지역 재정비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마을의 모습을 전면적으로 없애고 부수며 다시 새로 짓는 개발방식이 아닌, 낙후된 곳을 고쳐나가며 원형을 유지한다는 것이 바로 도시재생의 방식이다. 올부터 서울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 포함되면서,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을 정부와 협력해 강북 등 저개발 지역재생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강북 철도 교통망을 적극적으로 확충해 서울지역 내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또한 4차산업혁명의 흐름에 맞게 사물인터넷, 인공지능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문화컨텐츠, 페트로, 스마트인프라산업을 6대 스마트 전략산업으로 지정 육성키로 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metroseoul.co.kr

재개발구역 내 골목길,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

지난달 29일 도정조례 시의회 통과
사업시행자 부담 줄고 추진력 향상

재개발구역의 골목길이 무상양도 대상으로 인정돼 조합이 골목길 소유권을 무상으로 넘겨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9대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7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금번 통과된 서울시 도정조례에 따라 현황도로는 무상 양도 대상이 된다. 임대주택 매매계약 시점은 최초 일반 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때로 앞당겨진다.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을 제공

하거나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용적률이 완화된다.

직권해제와 관련해 유효기 간이 지난 사항

은 삭제되고, 직권해제 대상에 준공업지역 재개발구역이 포함된다.

김정태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그동안 정비사업 현장에서 현황도로의 무상양도 여부를 놓고 다툼이 있어 왔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현황도로를 무상양도 대상에 포함시켜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줄고, 정비사업의 추진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라 6개 정비사업 유형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업 3개 유형으로 통·폐합된다.

저소득자 집단거주 지역에서 실시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단독주택·다세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통합된다.

노후불량건축물밀집지역에서 하는 주택재개발과 상·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된다. 공동주택에서 진행한 재건축사업은 그대로 유지한다.

김정태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도정조례 전부개정안은 정비사업 유형을 통·폐합하고 사업관리와 지원사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며 "정비사업 유형 통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0@

서울 노점 합법화… 내년부터 도로점용허가제 도입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마련

내년부터 거리가게(노점) 운영자가 조건에 맞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마련,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도로점용허가제 도입 ▲가로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전매·전대금지 ▲운영자교육 ▲점용료 산정 및 부과·징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거리가게 운영자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해 도로점용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도로점용 허가는 1년 단위로 간접 운영해야 하며, 운영자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 단, 질병 등의 이유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



노점실명제 시행 2개월을 맞은 명동 롯데백화점 앞.

/중구

사전 승인을 받아 보조운영자(배우자)가 운영할 수 있다.

거리가게는 가로시설물 설치영역 내에 설치해야 한다. 최소 유포도 폭 2.5m 이상의 보도에만 설치할 수 있다. 버스·택시 대기 공간의 양 끝 지점으로부터 2m, 지하철·지하상가 출입구, 횡단보도 등으로부터 2.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최대 점용면적은 3m×2.5m 이하여야 한다. 판매대는 바퀴를 장착하거나 보도와 8cm 이상의 간격을 두어 이동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고정식으로는 설치할 수 없다.

도로점용허가 후 가게의 권리나 의무를 전매,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전가해선 안 된다. 법률상 유통이 금지된 물건은 판매할 수 없다.

거리가게 운영자는 점용허가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허가 면적을 초과해 점용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운영자는 연 1회 이상 거리가게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배광환 서울시 안전총괄관은 "이제 제도권 내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져 생계보장과 함께 시민들의 보행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여의교 전경 모습.

/서울시

여의교 9차로 확장·보행전용 다리 신설

서울시, 공사 마무리… 2일 개통

서울시는 여의교 8차로를 9차로로 확장하고, 보행전용 교량을 신설하는 공사를 착공 1년 8개월 만에 마무리하고 2일 개통한다고 1일 밝혔다.

여의교로 통행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기존 교량과 붙어있던 보행로가 차도로 리모델링됐다. 샛강생태공원과 연결된 계단이 여의교와 신설된 보행교량에 각각 설치돼 접근성이 높아졌다.

샛강을 건너 영등포구 여의도동과 신길동을 연결하는 여의교는 노들길에서

여의도 방향과 대방역에서 63빌딩(올림픽대로 상류IC) 방향 차량 간 엇갈림 현상이 과다하게 발생해 여의교오거리에서 대방지하차도까지 차량정체가 심했다.

확장된 1개 차로는 대방지하차도에서 63빌딩 방면 우회전 전용차로로 사용되고, 부족했던 대방지하차도에서 원효대로 방면 직진 차로가 늘어나게 된다.

시는 여의도오거리지체시간이 124.7초/대에서 61.3초/대로 약 50% 감소하고, 대방역사거리에서 여의교오거리 통행속도가 13.6km/h에서 39.8km/h로 193%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현정 기자

강남구 “모바일로 동대표 뽑는다”

모바일 서비스 165개 단지로 확대

서울 강남구는 아파트단지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주택 모바일 서비스를 165단지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공동주택 모바일 서비스는 관리규약 제·개정, 동대표 선출 등에 활용되는 24시간 의사결정 시스템이다. 현재 관내 24개 아파트단지에서 8500여 명이 모바일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구는 공동주택 모바일 시스템을 이용하는 아파트단지



강남구

GANG NAM GU

등 지원된다. 입주민의 70%

이상이 전자투표에 참여하면

모바일 시스템 도입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모바일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단지는 강남구청 공동주택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